



[산업]
SKT
'인바이츠 헬스케어' 설립
기업가치 1000억대
08

[AI뉴스]
실리콘밸리 들어간
AI스타트업
“노는 물이 다르네”
L4



“예식장 취소에 위약금 폭탄” “홍대클럽은 제2신천지 위험” 코로나에 우는 시민들… 위약금 가이드·클럽 휴업 촉구

결혼 앞둔 예비부부 위약금에 ‘울상’
예식장측, 공문·가이드라인 없어
서울시, 업체에 강제적 조치 불가능

강남·이태원·홍대 클럽 폐쇄 민원에
서울시내 대규모 클럽 영업자제 논의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으로 서울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
나19) 확진자 수가 200명을 돌파하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이 본격화되고 있
다. 코로나19로 손해를 봤거나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하는
시민들이 신문고를 두드리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들은 코로
나19와 관련해 행사 취소 위약금 가이
드라인 마련, 강남·홍대 클럽 영업 정
지, 식사문화 개선 권고 등을 시에 요구
했다.

이달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모 씨
는 “코로나19 이슈로 인해 가장 기쁜 날



홍대의 한 클럽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고 안내 현수막을 게시했다. /미포구

이 가장 슬픈 날이 될 것 같다”며 “부모
님과 친척이 모두 대구, 경북에 거주 중
이라 결혼식을 강행할 수 없어 날짜를
미루고자 예식장에 문의했더니 정부가
이드라인이 없어 계약서상에 적힌 대로
식대의 35%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취소도 아니고 일정 연기이
며 개인적인 변심이 아닌데도 이 금액
은 너무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예식장 측은 정부에서 공문이
나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없다며 책임
을 회피하는데 예비부부를 위한 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예비부부들도 국가적 재난상황
에서 소비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예
식장의 횡포를 폭로했다.

오는 21일 식을 올릴 예정이었던 박
모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을 비수
기 일자로 변경했음에도 웨딩홀 측은

예식비용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에만 위
약금 없이 변경 가능하다고 해 물며 겨
자며기로 연기했다”고 고백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소
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에서 고시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며 “이 기준
에 의하면 예식 예정일 29일 이전부터
계약해제 통보 시 총비용의 35%를 배
상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
준에 따라 업체에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을 이유로 업체에
강제적인 조치나 명령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강남과 이
태원, 홍대 클럽을 한시적으로 폐쇄해
달라는 민원도 제기됐다.

송파구에 거주하는 박모 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창인데 강남, 이태원, 홍대 클럽은 지난

주 주말까지 영업을 했다”면서 “클럽 특
성상 좁고 밀폐된 공간에 많게는 수천
명까지 밀집하게 되는데 여기서 코로나
가 터지면 신천지급 사태가 발생할 것”
이라고 걱정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중앙사고수습
본부의 ‘코로나-19 집단시설·다중이용
시설 대응 지침’에 의거해 업소를 찾는
손님과 종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토록
안내하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위생관리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이기 때문에 강제 폐쇄가 불가하고 재
산권 문제로 영업 자체를 강제하기 어
렵다”며 “방역 등 사전 예방 조치를 우
선 추진하는 한편 영업주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현재 시는 유통업소중앙회, 외식업
중앙회와 같은 직능 단체와 긴급 간담
회를 거쳐 서울시내 대규모 클럽 등의
영업 자체를 논의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hikl@metroseoul.co.kr

박원순 “콜센터 등 권고 불이행 시 폐쇄가능” 서울시, 자전거전용차로 침해 스마트앱으로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에 ‘비상’
서울 민간 콜센터 417곳 전수조사



박원순 서울시장이 11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
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어 “콜센터를 직영이나 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체 기업들은 대체로 대기
업”이라며 “대체 사무실 확보나 재택근
무 시행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생
각한다. 혹시 그렇지 못하면 저희가 재
정·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더 안전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콜센터는 집단감염에 취
약한 사무환경이다”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시설 폐
쇄 조치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

는 “위험이 증대된다고 생각될 경우 폐
쇄 행정명령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서울시의 민간기
업 재택근무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질
문도 나왔으나 박 시장은 구체적인 답
변을 내놓지 않았다.

교통 중심지인 신도림 일대 대중교
통을 통한 전파 가능성은 작게 봤다. 박
시장은 “신도립은 워낙 환승 인구가 많
은 지역이므로 지하철 방역을 수시로
하고 있다”며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
이 전철이나 버스에서 감염된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
다”고 말했다.

시는 콜센터 집단 감염과 신천지의
관련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박 시장
은 “일단 서울시가 확보한 명단과 대조
해 음성인 교인 2명을 파악했다”며 “저
희가 확보한 명단이 완벽하지 않고, 다른
시·도의 명단과도 대조해서 파악하
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신고기능 추가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애플
리케이션’에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신고 기능을 추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민신고제 대상은 ▲보도 ▲횡단보
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 ▲버
스 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와 통행위반 등이다.

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
통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 자료
에 따르면 2016~2018년 서울에서 발생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 위반 사례.
/서울시

한 자전거 교통사고 종 9173건 중 ‘자전
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
의 77.3%였다.

신고는 자전거 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지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
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
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 요건을 충
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된다.

/김현정 기자

피성년후견인도 4월 총선 투표 가능

총선에 1만5000여표 늘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
센터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피성년후견인도 선거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 요청 회신을 얻었다고 11일 밝혔
다. 이에 따라 4월 국회의원 선거에 1만
5000여표가 새롭게 생길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법원에서 선임한 후견인이
원하는 제도다. 2013년 7월 민법이 개정
되면서 기존의 금지신제도를 대체했다.

시는 “금지신제도는 금지신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았는데, 이를 대
체한 성년후견제도하에서 후견을 받는

피성년후견인의 선거권 유무를 두고 논
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익법센터장 김도희 변호사는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하
더라도 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듯이 피성년
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선거권이 박탈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행히 선거관리위원회의 적극적인 해
석으로 피성년후견인이 처음으로 투표
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해 제작했다. 아울러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한 모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를 마련했다.

이번에 제공되는 콘텐츠는 누구나 한
번쯤 의문을 가졌을 내용으로 구성돼
▲교통사고 발생 시 주의점 ▲자동차의
기본 특성과 에코 드라이빙 ▲상황별
안전운전 방법 ▲이륜차·자전거 안전주
행 방법 ▲교통약자(어린이, 고령자, 보
행보조용 의자 사용자 등)의 행동특
성 등에 대한 영상 35종 및 ▲퍼스널모
빌리티·전동킥보드 카드 뉴스 1종으로
총 36개의 콘텐츠를 통해 주제별 정확
한 정보를 제공한다.

/한용수 기자 hys@